

민주당 규제완화-개혁입법 '딜레마'

은산분리 완화 논란 시작... 규제완화 반대 없지만 '우클릭' 거부감
평화·정의 반발 민생입법 공조도 비상... 민주당 지도부 14일 워크숍

더불어민주당이 9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본격적인 개혁 입법 드라이브에 나설 태세지만 문재인 정부가 규제완화와 대기업을 통한 투자 활성화에 나서면서 경제 정책 전반에 대한 여권 내부의 조율과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일단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부작용 속에 지지율 하락을 경험하면서 규제 완화, 투자 활성화 등을 통한 혁신성장에 무게를 두고 있다.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완화는 대표적 사례다.

혁신성장을 위한 인터넷 은행 규제완화는 은행법 개정 대신 특례법 제정을 통해 산업자본의 의견결집 자본 보유율을 최고 4%에서 34%로 높이는 방안이 주로 거론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일 "인터넷은행에 한정해 혁신 IT 기업이 자본과 기술투자를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어 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도 8일 회동에서 인터넷은행 특례법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하는 등 속도를 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과거 당론으로 반대한 '은산분리 완화 반대' 입장을 철회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선만큼 공개 비판은 거의 없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당내 토론과 합의 과정이 없었으며 규제 완화가 최선이 아니라는 기류는 여전하다.

여기에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간 갈등설이 불거지면서 "문재인정부가 관료 집단에 포위돼 애초 하려던 혁신성장과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는 부정적 평가도 나오고 있다.

청와대가 전방위 규제혁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공공연히 밝히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비식별 개인정보 규제 완화와 의료기기 규제완화 등을 놓고도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민주당은 여당으로서 신산업을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규제개혁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는 명분을 내세워 국민 설득에 나선다는 방침이지만 내부적으로는 고민이 깊다. 당장, 민주당이 야당 시절 당론과 배치되는 것으로 보이는 이 같은 법안 처리에 앞장설 경우, 진보성향 지지자들의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없지 않다. 또 민주당화당과 정의당이 문재인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에 강력 반발하면서 9

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내심 기대를 걸어온 '개혁입법연대'가 출범도 전에 좌초하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또 더불어민주당은 규제 완화 법안은 보수 야당과, 개혁 입법은 진보 야당과 연대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졌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여권 일각에서는 규제 완화로는 단기적으로 경제 지표가 개선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오히려 당·정의 지지율이 동반 추락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한편, 민주당 원내대표단은 오는 14~15일 강원도 평창에서 상임위 간사단과 정기국회 운영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워크숍을 진행한다. 이어 31일에는 전체 국회의원 워크숍을 통해 지도부 입장을 전달하고 토론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규제완화를 비롯한 현안에 대해 당론 수준 의견 조율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바른미래당 전대 레이스 본격 점화

6명 컷오프 통과 국이 됐다.

12일 현재까지 정치권에는 정치적 중립감과 당의 최대주주인 안철수 전 의원의 지지를 받는다는 측면을 고려해 '순학규 대세론'을 예상하는 시각이 많다.

1인2표제에 따른 표 분산은 주요 변수다. 예선과 달리 본선에서는 반대로 바른정당 측 표가 분산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국민의당 출신 당원들은 손 후보와 김 후보에게 표를 몰아줄지 모른다.

하지만 안 후보 측 지지를 받는 손 후보가 김 후보를 압목적 러닝메이트로 삼을 수도 있지만, 당내 화합 행보 차원에서 러닝메이트 없이 선거운동에 임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와 손 후보의 선택이 주목된다.

평화·정의당 교섭단체 회복 안간힘

무소속 손금주·이용호에 구애

민주당과 정의당이 노획한 전 의원의 사망으로 잃은 공동교섭단체 지위를 복원하기 위해 무소속 의원 영입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두 당은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초대 원내대표였던 노 전 의원의 선거제도 개혁 유지를 받들기 위해서라도 다음 달 정기국회 전까지는 어떻게든 교섭단체를 회복하겠다고 각오를 다지고 있다.

우선 평화당은 정동영 신임 대표와 장병완 원내대표를 필두로 모든 소속 의원들이 무소속 의원 영입에 발 벗고 나선 상태다. 이들은 국민의당에 함께 있었던 무소속 손금주·이용호 의원에게 호남 정체성을 강조하며 입당이나 교섭단체 참여를 권유하고 있지만, 두 의원의 미온적 태도에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평화당과 정의당 소속 국회의원은 총 19명(평화 14명, 정의 5명)으로, 원내교섭단체 구성을 위한 의원 정수(20석)에 1명이 부족하다.

장병완 원내대표는 12일 "잘 될 것을 기대했는데 지금은 잠시 주춤한 상태"라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정의당은 지난 10일 비공개 의원모임에서 교섭단체 회복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정의당은 영입 대상인 의원들에게 당적 선택, 즉 입당을 요구하지 말고 무소속 상태에서 교섭단체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입당하지 않더라도 공동교섭단체 구성에 남입하면 무소속이나 다른 당 출신도 교섭단체에 참여할 수 있다.

하지만, 손금주·이용호 의원의 지역민들의 의견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선부른 결정은 내리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취임 후 첫 광주 방문 정동영 "5·18 계승 선거제도 개혁"

평화당 시의회서 현장 최고위
5·18묘지 참배, 기아차 방문

정동영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가 출범 후 처음으로 광주를 찾았다. 특히 정 대표는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아 '5·18 정신 계승'을 강조했다. 기아차 광주 공장을 방문하는 등 정동영 지지기반인 호남의 민심을 달렸다.

평화당 지도부는 지난 10일 광주시의회에서 현장 최고위원회회를 열었다. 취임 일성으로 선거제도 개혁을 주장한 정 대표는 이날도 선거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실천적으로 5·18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서 한국정치의 제도 개혁을 이뤄야 할 때"라며 "18년 전 평화민주당의 김대중 당시 총재가 지방자치제를 이뤘듯이 평화당이 2018년 말까지 당의 명운과 정치 생명을 걸고 꼭 정치제도, 선거제도 개혁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유성영 최고위원도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최저치인 58%를 기록하고 있고, 청와대와 정부의 갈등설이 제기되기도 한다"며 "현재 경제난이 심각해지면 제2의 IMF 위기가 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와 지적이 나오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경제실세 원인 규명을 위한 대토론회를 제안했다.

또 최경환 최고위원은 "평화당은 호남을 대변하는 유일 정당이고, 호남 정치를 끌고 나가야 하는 정당이다"며 "호남을 기반으로 전국 정당화의 길을 가겠다. 광주 시



민주당 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10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아 윤상원 열사 묘비를 쓸어만지고 있다. /연합뉴스

민들이 평화당을 지키고 키워달라"고 호소했다.

평화당은 회의에서 선거제도개혁특위, 갑질근절대책특위, 공공부문에 개혁 경제살리기특위를 구성하고 이들 특위 위원장에 천정배, 조배숙, 유성영 의원을 각각 임명하기로 의결했다.

이어 평화당 지도부는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았다. 정 대표는 참배를 마치고 난 뒤 "선거제도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 5·18 영령의 정신을 현실로 만들어 내겠다"며 "거대 양당의 기득권 구도를 반드시 허파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일각에서 '선거제도 개혁과 개헌을 분리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선거제도 개혁을 회피하려는 언술일 뿐"이라며 "선거제도 개혁이 개헌보다 먼저다"고 일축했다.

평화당 지도부는 기아차 광주공장을 방문

해 현장 목소리도 청취했다. 정 대표는 미국이 수입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면 수출 의존도가 높은 광주 자동차 산업과 지역 경제가 흔들릴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한반도 비핵화를 이끄는 한국에 관세 압박으로 어려움을 준다던 동맹국에 대한 예기가 아니라고 본다"며 "정치적인 해법은 우리가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6·13 선거비용 초과 지출 8건 고발

전남 선거 비용 보전액 210억

6·13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한 전남지역 후보자 및 회계책임자 10여명이 검찰에 고발됐다.

12일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했거나 선거사무원에게 법정수당 외 금품을 제공한 선거비용 위반행위 8건을 적발, 고발 조치했다.

선거비용 제한액의 0.5%를 초과한 사례가 7건, 선거사무원에게 법정수당 외 금품을 제공한 사례가 1건이다. 선거별로는 교육감 1건, 도의원 4건, 시·군의원 3건 등이다.

도선관위는 전남지역 선거 관련 정당·후보자가 쓴 선거비용 210억여원을 보전했다.

지방선거 이후 전체 709명 후보자 중 536명(비례대표 선거의 경우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선거비용 261억3000여만원 보전을 청구했다.

전남도선관위와 전남지역 시·군 선관위는 서면 심사와 현지 실사 등을 통해 이 가운데 50억7000여만원을 감액한 210억6000여만원을 지급했다.

한편, 당선되거나 유효 투표의 15% 이상을 득표해 보전액을 보전받은 후보는 445명, 득표율 10% 이상 15% 미만을 기록해 절반을 보전받은 후보는 91명이었다.

미리 보는 법전!

이달의 입법예고

앞으로 개정될 법령안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통합입법예고센터 ▶ 검색

| | | | | |
|---|---|---|--|---|
| <p>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8-28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p> <p>취지 유전자치료제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유전자치료제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유전자치료제 안전성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내용 (정) ① 유전자치료제 발현에 영향을 주기 위하여 투여하는 유전자치료제 안전성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 <p>국토교통부공고제2018-865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 <p>취지 재난·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재민 등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임시거처로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p> | <p>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8-299호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 <p>취지 창업 초기기업도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낮춤</p> <p>내용 (가) 창업 후 3년 초과 중소기업 - (개정) 모든 중소기업</p> | <p>행정안전부공고제2018-402호 도로명주소법 전부개정법령(안)</p> <p>취지 미래도시에 대응하는 주소 체계를 마련함</p> <p>내용 (가) 현재 도로의 건물 중심의 2차원의 평면적 주소부여 체계 - (개정) 지하·고가 차도 등 입체적 도로나 대형 건물 내 통행로에도 도로명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p> | <p>보건복지부공고제2018-483호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령(안)</p> <p>취지 직장어린이집의 직적 설치율을 높이고 육아부담을 낮춤</p> <p>내용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위탁보육을 허용함</p> |
| <p>행정안전부공고제2018-434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령(안)</p> <p>취지 지방자치단체의 사색 및 지역 특성에 따라 조례로 어린이놀이시설 내 일정행위를 제한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p> | <p>경찰청공고제2018-20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 <p>취지 해외에서 별도의 번역·공증 절차 없이도 국내운전면허증을 활용하여 운전할 수 있도록 함</p> <p>내용 운전면허증 뒷면을 영문 운전면허증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함</p> | <p>행정안전부공고제2018-441호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령(안)</p> <p>취지 소하천 정비·사용 허가에 대한 승계 등의 신고 시 처리기한을 설정하여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하도록 함</p> <p>내용 소하천 정비 및 정비·사용허가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 신고의 경우 관리청은 2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해야 함</p> | | |